金배추 4300원〈포기당〉·무 2500원〈개당〉… 설 식탁 위협하는 채소값

배추 평년 가격 40% 가까이 증가
무·고추·청상추 등도 최대 60%↑
한우·수산물도 올라… '물가 비상'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배추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

구분	지난 9일 기준 가격	평년대비 등락률
배추	2990원/포기당	39.8% ▲
무	1718원/개당	60.7% ▲
고추	1만1800원/600g당	55.3% ▲
상추	2만5072원/4kg당	67.6% ▲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 명절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가 커지고 있다. 올 겨울 이상 한파 여파로 배추와 무 등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설 성수품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주요 농산물 일일(9일 기준) 도매가격에 따르면 배추 가격(서울지역 기준)은 포기당 2990원으로 평년(최근 5년) 2월 상순보다 39.8% 올랐다.

무(개당 1718원)와 말린 고추(600g당 1만1800원), 청상추(4㎏당 2만5072원)도 각각 60.7%, 55.3%, 67.6%나 급등했다.

반면 오이(100개당 4만8765원)나 토마토(5㎏당 1만2089원) 등은 평년보다 각각 26.9%, 38.7%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적인 채소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도매가격으로 살펴보면 배추는 포기당 4300원으로 전월보다 45% 올랐고 무는 개당 2500원으로 49% 증가했다.

또 대파는 kg당 4000원으로 34%, 애호박은 64%, 오이 53%, 시금치는 16%가 각각 올랐다.

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올 겨울 강추위에 폭설까지 겹치는 등 이상 기후 때문이다. 이상 한파에 채소가 산지에서 얼어붙으며 공급량이 줄었고 난방 비용은 증가했다. 채소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올겨울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의 생육이 부진했다"며 "특히 겨울 채소의 주산지인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하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채소가격이 대체적으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채소뿐만 아니라 한우, 수산물 등도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한우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설 선물세트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었다.

12일 기준 한우갈비 100g당 평균가격은 5340원으로 평년(4752원)보다 12.4%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한우등심은 8264원으로 평년(7110원)대비 16.2%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수입산 낙지(냉장) 가격은 지난해 설 명절 때보다 70%나 급증했고 오징어(냉동) 가격은 48.4%가 올랐다.

aT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채소, 축산물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애호박은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부족한 상황하지만 설 명절 부침용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우등심의 경우 유통업체에서 사전물량 확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해 소매가가 지속 오를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韓 지하경제 GDP의 20%

IMF '전세계 지하경제' 조사 보고서

24년 새 10%p 가까이 내려가

세계 평균 34.5%서 27.8%로 ⬇

亞국가 중에선 일본이 가장 낮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99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하던 지하경제 규모는 2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됐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이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지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축소됐다가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서서히 쪼그라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 감소추세는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기존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슈나이더 교수가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로 추산한 게 가장 많이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근거로 든 내용이기도 하다.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2월 거시적 접근법 중 하나인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토대로 추정했을 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8%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면서 "이에 따라 국가 간 비교보다는 시계열 비교가 의미 있으며 지하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전 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축소 속도가 빠르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조지아(53.07%), 나이지리아(52.49%), 가봉(52.01%), 미얀마(50.99%) 등은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가 큰 축에 속했다. 호주(8.10%),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독일(7.75%), 아일랜드(9.58%), 네덜란드(7.83%), 뉴질랜드(8.97%), 영국(8.32%), 미국(7%)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았다.

/이봉준 기자 bj35sea@

금융사 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집중점검

2018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검사 60% '부당 영업행위' 집중

채용 모범규준도 마련토록 유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한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최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제대로 지키는 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던 데다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경영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경영실적에 연동됐는 지 등의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채용 모범규준도 마련토록 유도한다. 현재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도 적극 발굴해 제거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를 축소하고, 증권·보험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 조직 전체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도 이미 구축됐다.

검사 결과 중대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나 업무정지 등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 '슈퍼 주총데이' 없애고 전자투표… '주주권리 강화'

각 계열사별로 주총 날짜 분산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그룹내 상장계열사의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1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그룹 내 경영자문기구인 경영조정위원회(경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전자투표제 도입을 각 계열사에 적극 권고했다.

이에 한화그룹 각 계열사 이사회는 경조위의 권고를 기반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테크윈 등 7개 상장 계열사들은 3월 하순 중 슈퍼 주총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피해 각 계열사별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큐리티사업 부문 분할과 관련해 이미 3월 23을 주주총회 날짜를 공시한 한화테크윈은 일정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경조위는 개인투자자 참여 활성화와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끌어올리고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 상장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전자투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때 주주들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한화투자증권 등 4개사는 2017년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경조위의 권고에 따라 상장계열사 모두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주요 경영사항을 협의하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그룹 경영자문기구인 경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조위는 그룹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부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남규 부회장(금융부문)과 김창범 부회장(유화·에너지), 이태종 대표(방산·제조), 최광호 대표(건설·서비스) 등 4개 사업부문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조위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열사간 사업 조정 등 그룹 중요 사항에 대한 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린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